

# 플뿌리 운동 활성화를 위한 '가벼운 공동체' 실험 전략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1. 들어가며

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강한 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의 경험과 향수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디지털 세계화로 인해 구축된 정보 지배체제(information regime)에서도 유지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태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민성'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독해, 그리고 시민으로 '다시 서기'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다양한 가치가 치열하게 경쟁 및 갈등하고 있다. 이익집단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엔지오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공공선을 위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제공된 프레임 안에 갇힌 개인은 확증된 편향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협력 더 나아가 연대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운동은 왜소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사회운동의 '과잉사회화'로 인해 '사회운동사회(social movement society)'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Meyer & Tarrow 1998). 누가 사회운동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아니라 집단의 이권을 위해 모두가 사회운동 전략을 동원하는 사회운동사회가 되어 사회운동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시민은 이익집단, 사회운동, 엔지오의 경계를 비판적으로 독해하지 못함으로써 反운동 프레임과의 갈등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은 자신의 역량과 권위의 원천인 도덕성, 책임성,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결과 광의의 시민사회 영역과의 안정적인 연대의 틀을 구축하지 못한 채 소수의 사회운동 집단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민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성(civility)을 갖춘 시민’을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결코 시민성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주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공석기·임현진 2020). 그런데 주민과 시민의 구별된 삶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주민은 다시 개인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시민은 자본주의, 소비주의, 디지털 혁명, 정보지배체제와 알고크라시(algocracy)의 부상으로 인해 개인으로 분절과 고립되고 있어 시민으로 다시 서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공석기·정수복·임현진 2023; Lim & Kong 2020).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풀뿌리 운동이 개인을, 주민을 시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다수가 공공선을 주장하는 광의의 시민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 혹은 지방의 시민사회운동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거버넌스의 뜻으로 인해 협치로 포섭되어 ‘운동의 쇠락’을 경

힘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혁명과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시대’를 촉진하고 있다. 개인은 사회문제를 공공이 아닌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관리와 통제를 비판적으로 독해하지 못하고 있다. 분절과 고립된 개인이 가상으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 구체적인 장소로 나와 서로를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절실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개인을 주민에서 시민으로 다시 서는 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풀뿌리 지역에서 고립된 개인 혹은 주민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 이상 개념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즉, 공동의 참여 경험을 통한 ‘시민권’을 구현하는 과정이 풀뿌리 차원의 시민사회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저자는 시민권을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통적인 시민사회운동 조직보다는 풀뿌리 차원의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구성 전략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벼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제와 내용은 지역 회생에서 돌봄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풀뿌리 운동의 핵심 원리는 민주주의이며, 작동 메커니즘은 가벼운 공동체 구성 전략이다. 그 가능성을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노력을 시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Algocracy의 습격

### 1)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지구적 확산을 통해 초국적 차원에서 풀

뿌리 지역으로까지 모든 사회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도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장소로서의 지역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주민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소속감과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개인을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로 더욱 무장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의 과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찾기보다는 국가에게 모든 해결책을 요구하는 수동적 개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개인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는 쌓이고 있지만 이것이 진실인지, 지혜인지, 올바른 판단인지 모른 채 나의 선택을 통해 무한대의 정보를 제공하며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렴되고 있다(이광석 2020).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수렴현상은 개인을 단절, 분리 및 고립시켜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플랫폼을 매개로 간접적인 접촉을 선택하게 만든다. 그 결과 호혜적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과 평가를 ‘별점’과 ‘좋아요’ 버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사실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도래는 개인은 더욱 쉽게 연결되니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지배 즉, 알고크라시(Algoracy)를 통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독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Danaher 2016). 이제는 구글, 아마존,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의 디지털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개인을 소비 대중으로 전락시켜, 그들의 활동을 관찰 및 분석하여 소비 욕구를 유인 및 통제할 정도로 연결된 개인은 강제적 소비에 노출되고 있다. 요컨대, 알고크라시의 목적은 우리는 쉽게 연결되어 있기에

마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고립된 개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 2) 알고크라시의 습격에 대한 비판적 독해

디지털 세계화는 공유경제를 확산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다수의 노동자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착취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Ravenelle 2019). 이들은 보이지 않게 통제되면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며 배제와 단절의 삶으로 몰리게 된다. 비록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경제는 결코 도시 공간의 이슈로 국한되지 않고 농어촌 사회에 구석 구석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중산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양극화를 더욱 강화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통제에 의해 존엄을 아끼며 더 많은 업무를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강혜인·허환주 2021). 스스로 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 소득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랫폼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깃(gig) 노동자는 지역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소외되기에 공동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된다. 의사결정에서의 주변화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과 복지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그들이 마주하는 소외와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었고, 플랫폼 경제로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단골이 사라졌고, 지역 구성원 간의 만남이 줄어들니 상호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플랫폼 경제는 소비자들의 ‘댓글’과 ‘좋아요’ 혹은 ‘별점’ 평가에 목을 매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뉴노멀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소비자 개인은 결코 디지털 전환의 주체로 올라서지 못하게 된다. 구체적인 풀뿌리 장소에서의 만남 속에서 상호 소통하고 궁리하고 대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는 협동과 연대를 위한 대안적 플랫폼이 절실하다 (공석기·정수복·임현진 2023).

이런 견지에서 주변화되고 분절화되고 있는 개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민주적 시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사회적 여파로 인해 개인은 디지털 공간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들이 구체적인 장소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꺼린다. 이들에게 혼종적(hybrid) 공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인의 시대는 물리적 공론장보다는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의 온라인 만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은 인공지능(AI) 도움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좋아요’ 버튼으로 자기 의사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소셜미디어를 선호한다. 즉 소통, 공론장, 그리고 담론은 사라지고 자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기에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된다(한병철 2023). 타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자세가 없기에 소통을 통해 담론을 구성하는 능력은 사라지고 만다. 시민성의

핵심은 타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공공 토론을 통한 소통 민주주의 구현과 정책에 대한 참여가 요원해 지고 있다.

요컨대,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크라시는 시민을 “쉽게 연결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easily connected but incompetent) 개인 소비자들로 전락시킨다. 개인은 알고크라시의 조정과 관리의 대상이 되며, 능력주의와 공정의 프레임으로 무장하여 각자도생의 전쟁터에 나서고 있다. 알고크라시와 개인의 시대라는 이중의 도전에 대해 풀뿌리 지역 주민은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비판적 독해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과연 풀뿌리 지역은 공동으로 비판적 독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소통의 정치(Talking Politics)가 작동하고 있는가?

### 3. 지역 회생을 위한 소통 정치에 대한 성찰

저자는 『마을에 해답이 있다』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역’을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 5가지 요인—끈기, 소통, 참여, 혁신, 그리고 거버넌스—을 강조하였다(공석기·임현진 2020).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지역 회생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성찰하는 데도 중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사실 한국 지역사회 재생의 거침들은 지역 차별과 열패감에서 비롯된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은 9.5%에 불과하다. 서울에 모든 기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상점, 서비스 제공자 등은 장년층 즉, 시니어가 담당하고 있다. 사실 수도권의 기회는 직업 이외에도 사회, 문화, 복지 공간 시설이 지역 지방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비록 주거와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특

혜로 인해 지역 거주민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하승우 2020). 지역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는 세뇌 교육을 받고 산다. 노골적인 대학 서열화는 지방을 경시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멸시키고 있다. 지역 주민 스스로가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이미 중앙에 종속되어 있기에 지역 사랑, 지방 분권의 중요성과 자긍심이 떨어진다(이일균 2020).

최근 저자가 일본을 방문한 지역 소도시—도야마 현의 가미이치(上市) 그리고 군마현의 다테바야시(館林)—의 경우, 인구감소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만 중앙을 바라만 보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고 적절한 규모의 지역 공동체를 유지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특별히 공무원과 사회적 경제 더 나아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그 지역 출신으로서 애郷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혁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조적으로 한국 지방 중소도시 공무원 혹은 사회적경제 참여자는 지역에 대한 지원 감소와 차별에 대해 대안으로 공동으로 모색하기보다는 먼저 열패감에 빠져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지역 회생을 위한 풀뿌리 운동은 바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 재생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풀뿌리 운동의 또 다른 걸림돌로 우리가 성찰해야 할 문제는 선거로 인한 소통 정치의 왜곡이다. 지역의 다수 언론이 이익집단으로 전략하여 소위 황색 저널리즘을 양산하고 있다. 실례로 나주시의 경우는 출입 기자로 등록된 수가 무려 150명이나 된다. 왜 출입 기자가 이토록 많을까? 기자들이 시정 감시와 공공선을 위한 문제 제기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이해관계에 편승한 편파 보도와 패거리 정

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사실 지역 이권정치는 행정 처리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지역에는 소위 ‘형님정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언니, 형님 연줄행정’이 동원되고 있다. 때로는 이것이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민원과 행정처리가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해관계에 따른 행정 편의주의이고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연결되는 곳이 선거 정치이다. 형님 정치가 작동하는 다수의 지역에서는 주민은 가치, 이념, 진영, 정책 논리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석기·임현진 2020).

지역에서는 선거를 전후하여 열린 토론과 합의를 지향하는 소통의 정치보다는 민원과 떼쓰기 전략을 동원한 이익집단 정치가 기승을 부린다. 지역사회는 연대와 협동보다는 어느덧 비방, 혐오, 불신 그리고 편 가르기가 횡행한다. 이러한 거침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소통 정치를 위한 공간으로 나와야 한다 (Gamson 1992). 이를 위한 풀뿌리 운동은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는 훈련 즉 ‘경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한병철 2023). 소통의 정치를 통해 경청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상호 타협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구현이 차곡차곡 쌓아갈 때 지역재생의 디딤돌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 역시 디지털 혁명과 알고리즘의 지배로 소통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가짜뉴스를 통한 편 가르기와 진영 대립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론장은 사라지고 왜곡된 정보의 율타리 속에서 집단 내의 결속만 강화되는 자기확증 효과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소통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블랙박스

에 우리를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Danaher 2016). 이러한 경청의 위기로 타자가 사라지는 것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셸 라몽(Michèle Lamont)는 최근 저서 『Seeing Others』를 통해 문화적 시민이 타자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안의 정보에 갇혀 있음을 일갈하고 있다(Lamont 2023). 정보지배체제 하에서는 빅데이터와 AI가 지배가 관리하는 정보지배체제는 상호 논증이 사라지니 담론도 소통도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차별을 넘어선 존중과 협력이라는 시민성의 요건을 갖추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증가로 정의보다는 오직 사회시스템의 최적화만을 강조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그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소통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인권과 인간성의 위기이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안락한’ 디지털 감옥에서는 지배체제에 맞선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좋아요’와 게시물 올리기에 열중한다. 이런 행동에서는 공공선을 위한 저항과 비판의 정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병철 2023). 풀뿌리 운동은 이러한 저항과 비판정신을 다시금 갖추는 시민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인포크라시(infocracy)로 변질되고 있다. 논증과 담론정치가 생동감 있게 전개되는 공론장을 사라지고 오직 퍼포먼스와 이미지 정치만 부각된다. 합리적 논쟁과 담론 경쟁보다는 흥분하고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이 풀뿌리 지역으로 갈수록 황색 저널리즘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풀뿌리 운동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남을 바라보고 그의 얘기를 듣는 시민을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경청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촉진자로 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컨대, 풀뿌리 민주주의는 호흡이 길고, 지루한 과정을 전제하는 것이다. 풀뿌리 운동은 왜곡된 소통 정치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4. ‘가벼운 공동체’의 새로운 실험 전략: 한-일 풀뿌리 지역 사례

##### 1) 돌봄 민주주의와 지역 공동체

최근 돌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돌봄(care)과 관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수준이고, 민간차원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데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어르신까지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이나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가장 친숙한 지역 안에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조안 트론토 2021). 그러나 현실은 돌봄의 문제가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게만 맡겨지는 것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향후 돌봄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척도이자 실험장이 될 것이다.

저자는 돌봄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가벼운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다. 돌봄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만찌니(Ezio Manzini)는 이것을 친밀성 혹은 근접성(proximity) 개념으로 설명한다(Manzini 2022).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삶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속으로 강하게 편입되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거주 공간에서 정보나 상품 혹은 사회 서비스를 주문하고 소비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앞 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손과 발이 움직여 공론장으로 나와 접촉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공동의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그저 사회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다(한병철 2023). 마찬가지로 직장과 집의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문화와 오락도, 사회적 서비스도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공공의 장소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협동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는 들어주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연결된 개인은 정보에 대한 갈망으로 순간적인 소비와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하다 보니 인내심을 갖고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는 것을 거부한다. 결국 돌봄과 민주주의는 개인이 아닌 관계의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이고, 호혜와 협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풀뿌리 운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돌봄과 민주주의는 근접성과 관계성을 전제로 한 만남과 소통이 핵심이다. 그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필요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평생주기적 관점에서 제공하고 받는 가벼운 공동체를 기획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의 돌봄 그리고 친숙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소통 민주주의를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합의할 때 자연스럽게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주목하게 된다. 돌봄은 장소, 관계, 그리고 근접성의 요소가 가장 핵심이며 이것을 가장 안

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 공동체이다(Manzini 2022). 사실 원거리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한시적 관계를 전제한다. 우리는 돌봄 없이는 홀로 설 수 없고, 살수도 없는 존재이다.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 돌봄을 받고 살며, 때로는 돌봄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시 돌봄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다. 즉, 돌봄 없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순환적 돌봄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석기 2023). 그러나 현실은 과거 돌봄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고 교환하는 지역공동체가 소멸되었다. 지역 주민은 고립된 개인으로 돌봄 소비자로 전락 되었다. 돌봄의 사유화 혹은 상품화는 중국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게 된다.

요컨대, 돌봄은 반드시 민주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돌봄 매뉴얼 혹은 모듈이 존재할 수 없다. 모두가 지역과 구성원 그리고 시민사회 생태계에 따라 조정되고 서비스를 새롭게 창출하는 맞춤형 과정이다. 디지털 혁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처방과 서비스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돌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일정 장소 안에서의 사람의 만남으로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친숙한 만남과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가벼운 공동체 전략이 필요하며,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참여자는 단순한 지역 주민이 아니라 호혜적인 돌봄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2)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전략 모델

앞서 돌봄과 민주주의를 결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풀뿌리 지역 공동체내에서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소위 ‘주민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실험을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은 개인으로서 지역의 경계 안에서 활동하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열린 차원의 협동과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서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공동체 전략은 비록 법과 제도적 접근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장소에서 돌봄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개인이 주민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자 플랫폼으로서 ‘가벼운 공동체’를 주목하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주민은 상호 소통하고 참여하고 협력의 자세로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어느덧 시민성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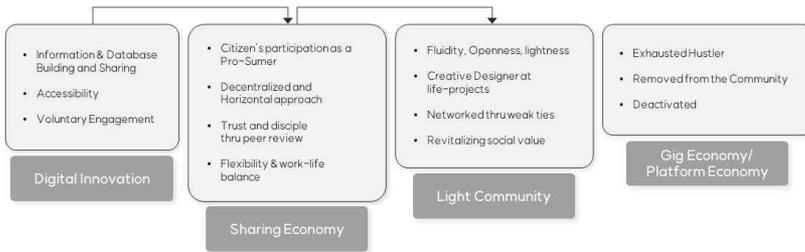
가벼운 공동체 전략은 결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화 맥락에서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소위 ‘위로부터의 기획’의 공동체 구축 전략이라기보다는 풀뿌리 참여를 강조한다. 즉, 장소와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핵심이다. 일정 범위의 공간(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대안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지역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인 것이다 (공석기·정수복·임현진 2023). 물론 마주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경계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은 협동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는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안팎의 위기 속에서 마을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풀뿌리에서 공동체적 특성을 재발견하는 것을 강조한다. 물리적으로 근접한 장소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혼종성(hybrid) 전략으로서 가벼운 공동체를 강조한다.

만찌니(E. Manzini)는 현대사회의 변화 맥락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공동체를 부활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flexible), 열려 있고(open), 약한 연결고리(light ties)에 기초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를 통해 개별화되고, 분리되고,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을 극복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Manzini 2019). 우리가 꿈꾸는 지역 공동체는 결코 전통적인 형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풀뿌리 구성원 스스로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적응하다가도 혹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 공동체로 쉽게 옮겨 갈 수 있는 ‘가벼운’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는 가벼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일정 장소 즉, 지역(도시 혹은 마을)에서 협동과 호혜의 자원을 재발견하기(exploring), 주민 간의 협동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기(collaborating), 주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고 실천하기(acting) 그리고 기존 관습적 활동과 경계를 창의적 넘어서기(transgressing),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혁신적 변화를 추동하기(transforming)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역 구성원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다(Manzini 2019). 이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궁리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 혹은 발명하게

된다. 이에 기초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게 되고 그 사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게 된다. 부연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솔테(J. Scholte)가 시민사회 운동이 민주주의를 제고시키는 과정으로 강조한, 공공교육, 토론, 참여 그리고 투명성과 책무성 전략과 연결되기도 한다(Scholte 2003). 이 과정은 투명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구현과정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공동체> 구축 모델 >

출처: 공석기, 『N포럼2022 Re-imagining Community』 발표자료.

이처럼 가벼운 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로서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은 지역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맛보고, 동시에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공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 지역시민사회에서 진행된 지방회생 프로젝트를 가벼운 공동체 모델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장애물로 텃세, 인권이 아닌 이익사회로 전환, 선거정치, 토건주의, 주기적 지방선거로 인한 편 가르기와 혐오정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추진된 각종 보조금 사업은 지역 시민사회 내 사업간,

조직간 그리고 사람 간의 칸막이 현상을 반복적으로 노정하고 있다(공석기·임현진 2020). 또한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중앙과 지방정부 역시 부서별로 성과 경쟁 속에서 유사 사업을 지역 혹은 시간차를 보이면서 벤치마킹하며 중복 투자하는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실례로 우리 안에 착근된 지역에 대한 무시 즉, 삼농-농업, 농촌, 농민-정치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다. 여전히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퍼주는 불필요한 사업으로서 오해하고 있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농촌, 농업, 그리고 농민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 한국 사회에는 삼농정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삼농에 대한 무시가 결국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요컨대, 그동안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지역희생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사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겨진 경우가 많았다.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소외되고 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고립감은 여전하다. 이처럼 지역 정부가 추진한 수많은 협치는 실패를 거듭하여 지역의 현실은 불평등, 주민 갈등, 지역 상권 침체, 지방학교 폐교,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이고, 지역을 바라보는 시민의 가치관이다.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풀뿌리 지역 운동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지역이며, 가벼운 공동체 전략으로 풀뿌리 운동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

### 3) 한국 사례: 노원 에너지제로하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성찰<sup>1</sup>

저자는 지난 2월 초 에너지 전환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 선도적 사업으로 잘 알려진 노원구 에너지제로주택(이하 EZ House)을 다시금 방문하였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자립과 전환이라는 화두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유의미한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큰 장애물로 다가왔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EZ House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사업이었다. 많은 지자체와 건설사 그리고 공기업이 EZ House 실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20세대(117세대 임대주택 + 3세대 커뮤니티 활동가 거주) 중에 90%가 신혼세대이고 10%가 노년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 가정은 바쁜 직장 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나 스스로 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EZ House는 무조건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거주자는 조합원이지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해 아직도 참여가 저조하다. 협동적 개인, 주민, 시민으로 볼 때 여전히 개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EZ House에 입주자를 협동적 경험 혹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참여하려는 의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사업을 출발한 것이 근본적인 한계이다. EZ House는 기후 위기,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자립

---

<sup>1</sup> 한국 사례는 임현진·공석기 “한국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월간중앙 5월호』(pp. 182-187)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인용함.

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 실험이다.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풀뿌리 활동을 통해 이른바 ‘풀뿌리 세계시민’(rooted cosmopolitan)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주민이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나 협동적 경험이 전무한 젊은 세대를 일정 공간 안에 함께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이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기후정의라는 ‘가치를 먹고 사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과 활동 비전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위로부터 기획 프로젝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단순한 정책 비전을 갖고 추진한 이 사업은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의 한계의 대표적 사례이다. 초국적 경쟁사회에서 개인으로 살다가 이제 Ez House 주민으로 살 수 있는 외적 환경이 마련되었지만, 주민들끼리의 친근감, 협동을 통한 신뢰감 구축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함께 얘기하고 공동의 문제를 토론하고 어젠다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공리하는 공론장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은 협동조합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일을 적극적으로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현주소를 반증해 주는 사례이다.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는 주중에 바쁜 회사 일과 육아로 여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거주자 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최대 10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그 동안의 에너지전환 가치에 대한 학습과 공동체 참여라는 귀한 자산과 경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

회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패를 거듭할까?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좋은 주제이며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과거의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당위적인 방식과 열정에만 기초하여 접근한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가 정부와의 거버넌스(협치) 전략은 부정할 수 없이 중요한 지렛대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끈기 있게 추진되지 못하게 된 원인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정책, 토건 세력의 무책임한 투기적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비전에 대한 풀뿌리 차원의 공론장 부재 등으로 갈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일례로 지난 20여년간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햇빛발전소, 풍력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부와 기업 주도로 진행되었거나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은 에너지 전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 및 자립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충돌에서 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있는가부터 풀뿌리 운동은 성찰하고 풀뿌리 운동이 주목해야 할 시민교육의 첫 주제이다. 노원구의 에너지제로주택 사업 역시 프로젝트의 출발은 지방정부 주도였고, 에너지 전환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그 가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 중에서 기후정의의 위한 가치 전환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추동하는 실험이 넘쳐나야 할 때이다. 이러한 풀뿌리 시민참여가 시민교육의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이 되어야 한다.

이제 노원구 EZ House가 보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개인에서 주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리빙랩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직 10년의 경험에 이르지 못한 EZ House는 이제는 풀뿌리 주민 중심으로 다시 30년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에게 거주와 안전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전환 마을공동체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다양한 협동적 실험을 함께 궁리하고 디자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될 때 가벼운 공동체 실험을 구현해 볼 수 있다. 가벼운 공동체는 구성원이 들고(entry) 나는(exit) 것이 자유로우며,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래로부터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가벼운 공동체 실험은 EZ House 한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이웃하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바로 주민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풀뿌리 참여와 시민교육으로부터 시민성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다. 풀뿌리 운동도 바로 이런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풀뿌리 운동은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EZ House와 같은 가벼운 공동체의 실험장이 필요하다.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 실험을 주목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기획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아래로부터 참여 그리고 개인이 주민 더 나아가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풀뿌리 주민의 자발적 기획과 프로젝트 구상 및 구현의 과정에서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제, 예를 들어 돌봄 민주주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 사례: 가미야마, 가미이치, 다테바야시의 ‘창의적 풀뿌리 세계시민’<sup>2</sup>

지역 회생을 위한 새로운 실험으로 가벼운 공동체 전략의 핵심은 개방성(openness)과 유동성(fluidity) 그리고 창의성(creativity) 제고를 위한 구성원 간의 소통 민주주의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그 지역에 대한 기억과 소중한 경험을 통해 장소에 대한 애착을 품고 있는 리더의 존재이다. 여기서 리더는 ‘창의적 풀뿌리 세계시민’(Creative Rooted Cosmopolitan)으로서의 리더를 의미한다. 지역을 떠나 있다가도 언젠가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이 들고 날 수 있는 유동성의 분위기 그리고 누구든지 풀뿌리에서 다양한 창의적 실험과 기획을 추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력적 분위기가 가벼운 공동체의 기본 생태계이다. 일본의 창의적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세가지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에도 이미 잘 알려진 가미야마 마을(神山町)의 최근의 실험을 가벼운 공동체 전략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지난 30년의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가미야마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풀뿌리의 문제도 전지구적 문제

---

<sup>2</sup>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가미야마 사례는 임현진·공석기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월간중앙 5월호』 (pp. 182-187)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인용함.

와 결합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지역에 갇혀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지역의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과 연결하여 그 답을 찾아보고자 지난 30년간 애쓰고 있는 일본의 가미야마 프로젝트를 통해 풀뿌리 지역의 주민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가미야마는 일본 동경 하테다 공항에서 1시간 비행 후, 1시간의 버스 이동으로 도착하는 전형적인 일본 농촌지역 소도시로서 지방 회생 혹은 마을 재생 프로젝트로 한국에도 이미 알려진 곳이다. 그렇지만 가미야마 지역 회복과 재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30년을 지난 지금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지역에 미래지향적인 대학이 시작된다. 가미야마 마루고토 기술대학(Marugoto College of Technology)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UI/UX 디자인 교육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교육 등을 가르친다.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결합된 지역 특화된 대학 교육과정인 셈이다. 200명 학생—5단계 그룹별 40명—과 21명 교수 그리고 50명의 외부 전문가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가미야마 지역 전체가 캠퍼스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 정부 그리고 기업이 풀뿌리와 전지구적 연계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리빙랩인 셈이다.

사실 가미야마 지역 재생 프로젝트의 시발은 이곳 출신인 신야 오오미나미 신야(大南信也) 전 Green Valley 대표의 애향심과 리더십에서 출발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출신으로 1992년에 가미야마 국제교류협회를 만들어 1999년부터 가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것이 2004년에 NPO Green Valley로 전

환하였다. 이 단체는 일본의 농촌지역을 아름답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통해 지역을 창의롭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별히 오오미나미 대표는 ‘창의적 인구감소’(creative depopulation)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창의적 인구감소는 지역의 인구감소 경향은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신에 적은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젊은 청년을 지역으로 초대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즉, 농촌 지역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직무와 상점 오픈을 통해 그들에게 일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였다. 오오미나미 대표는 도쿄 혹은 오사카와 같은 글로벌 도시에서 일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가미야마가 대도시보다 더 풍성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다면 결코 지방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풀뿌리 지역과의 친밀감과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기업 ‘가미야마 연결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지향 기업을 지역으로 연결시켜 주었고 17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저자는 풀뿌리 주민의 협력과 동의 과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1950년에 21,000여명의 인구가 2060년에는 1,100명 즉, 약 5%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에 풀뿌리 주민은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창조적 인구감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주민이 앞서 강조한 가벼운 공동체 전략 즉, 개방성, 유연성(톨레랑스)과 유동성 그리고 수평적 열린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풀뿌리 주민의 매우 중요한 가치전환 과제였다. 이것을 추동한 사람이 바로 가미야마 지역에 대한 애향심으로 꼭 찬 앤지오 활동가 오오미나미 대표였다.

이 엔지오는 풀뿌리 주민과 함께 만나 현실을 공유하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더불어 살기 위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께 궁리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대안을 발굴한 것이다. 아마도 Green Valley NPO가 가미야마 풀뿌리 주민에게 전지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풀뿌리 주민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가미야마 프로젝트는 이제 30년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도전과제였다. 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지역 대학 설립이었고, 그 첫 실험으로 2023년 4월에 시작된 마루고토 기술대학이었다. 이것은 가미야마 지역 재생의 제2의 실험실(living lab)이 될 것이다.

둘째, 도야마현(富山県)의 가미이치 마을(上市町)을 주목하고자 한다.<sup>3</sup> 일본 중북부의 도야마(富山)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친환경 도시이다. 도야마시에서 30분을 내륙으로 운전해 가면 북알프스라 불리는 3000m 높이의 히다(飛騨)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지는데 그 아래에 위치한 곳이 가미이치 마을이다. 가미이치 마을은 일본의 여느 지방 소도시처럼 인구감소와 출산 장려, 지역 경제 활성화, 노인 돌봄 등의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가미이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쓰루기다케(劔岳)이다. 이 산은 해발 2,999m에 달하며 일반 등산객이 오르기에는 매우 험한 산이지만 전문 산악인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곳이다. 가미이치는 쓰루기다케와 연결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대에 걸쳐 농업을 이

---

<sup>3</sup> 가미이치 마을에 대한 분석은 저자가 2023년 8월 29일~9월 1일까지 진행한 현지 방문 및 인터뷰 조사에 기초하고 있음.

어가는 중년의 농부 이나바 사토루(稲葉悟) 이나바농원대표는 가미이치 로컬푸드로서 자신의 농산품 가치를 창의적 디자인과 브랜딩 그리고 가공식품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농부로서의 피곤함을 결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가미이치 사계절을 만끽하는 여유로움을 보여주었다. 그는 논 농사 이외에도 밭농사 작물로 멜론에서 토란(taro)까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아내는 상품디자인도 직접 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의 창의적 협업과 분업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도시에서 도야마현의 아름다운 산과 자연생태계에 빠져서 귀촌한 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이치 도코로씨는 쓰루기다케(颯岳)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도쿄를 떠나 가미이치로 이주한 사례이다. 그가 가미이치로 이주해 온지 2년이 채 되지 않지만, 가미이치 마을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생태 투어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도쿄에서 투어리즘, 자연생태계, 유기농, 지역 농산물 관련하여 강의를 하였다. 결국 가미이치의 매력에 빠져 가족과 함께 이주하게 되었다.

도코로씨는 가미이치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느리지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가미이치 지방정부와도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함께 궁리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가미이치 은퇴자들의 쓰루기다케 산림 생태계 보호와 휴양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도코로씨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했다. 이들의 협업의 모습 속에서 가벼운 공동체 실험의 초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투어리즘 전문가로서 도코로씨가 쓰루기 산의 아름

답고 풍성한 생태계를 어떻게 투어리즘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창의적인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이나 지방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풀뿌리 주민으로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과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얘기도 솔직히 나누는 소통의 과정이 주목된다. 향후 그가 투어리즘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지역 주민들이 외부 참여자의 기획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도쿄로씨가 지방정부 공무원, 농민, 그리고 지역 시니어들과 협력하는 모습에서는 가벼운 공동체의 실험 전략이 꾸준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군마현(群馬県), 다테바야시(館林)에서 활동하고 있는 히데히코 미타(三田秀彦) ‘정글 딜리버리’(Jungle Delivery) 대표의 농업 관련 혁신활동을 주목하고자 한다.<sup>4</sup> 군마현은 동경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022년에 첫 방문에서 받은 인상은 다테바야시는 꽃의 도시로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공무원의 협치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이 협치의 중심에 미타 대표가 존재한다. 그는 다테바야시 상공회의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지역 로컬푸드 혁신사업으로 올리브 재배에 집중하면서 정글 딜리버리 회사를 설립하였다. 유희지에 1,000그루 이상의 올리브 나무를 심어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여 올리브유, 차, 그리고 화장품까지 개발하고 있다. 유기농업을 활용한 올리브 재배 방식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군마현 지역의 스타벅스

<sup>4</sup> 다테바야시 마을에 대한 분석은 저자가 2023년 9월 3~5일까지 진행한 현지 방문 및 인터뷰 조사에 기초하고 있음.

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 원두 찌꺼기를 올리브 나무의 퇴비로 활용하도록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순환과 유기농법을 활용한 올리브 재배 방식은 정글딜리버리라는 회사 명처럼 기후위기와 사막화를 막기 위한 정글을 삶의 현장으로 배달함으로써 에너지 전환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에 와세다, 도요대학 그리고 상품 개발 연구소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연구 및 상품개발 협력망을 토대로 정글 딜리버리는 유기농 올리브 재배는 물론 다양한 상품개발 그리고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친환경, 로컬푸드, 에너지 전환, 사회적경제 그리고 협치를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미타 대표는 말 그대로 ‘풀뿌리 세계시민’이며 ‘지역 창의적 혁신가(local creator)’로 부를 만하다. 이러한 창의성이 빛을 발하게 된 요인은 다테바야시 지역시민사회 생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려는 협동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 농업 분야의 혁신을 배우고자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젊은 부부 아직 아기가 없는 30대 초반 부부는 정글 딜리버리 프로젝트를 배우고자 다테바야시로 이주해 온 경우이다. 물론 다테바야시 지역 출신의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는 무려 4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 당장 정글 딜리버리가 많은 수익을 올리는 지를 가늠할 수 없지만 젊은 부부가 대도시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유기농 올리브 재배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청년의 귀

촌, 귀농, 귀향 지원정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사업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테바야시는 농촌, 농업 그리고 농민의 삼농을 지키는 정책과 지원이 탄실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청년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일본의 가미야마, 가미이치, 그리고 다테바야시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지역회생 프로젝트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의 실험장이며, 그곳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바로 아래로부터 풀뿌리 세계시민이 지역 창의적 혁신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풀뿌리 리더십이 형성되는 생태계가 자리 잡지 못할 경우 지역의 소통 정치는 보이지 않는 알고크라시의 위협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된다.

## 5. 나오며

저자는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중층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회복력(local resilience)을 제고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본 글에서는 광의의 시민사회 영역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전통적인 방식의 시민사회 운동을 넘어선 새로운 실험 전략으로 가벼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풀뿌리 지역일 수 밖에 없다. 이를 담당하는 주체 역시 구체적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과 소셜 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경제 활동을 디지털 플랫폼 경제

로 수렴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 과정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지배하는 알고리즘의 위협에 대한 비판적 독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보지배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독해와 저항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이 더욱 축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비판적 독해를 담당하는 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도전 과제인 것이다. 시민은 창의적인 혁신을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여 추동할 수 있는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풀뿌리 운동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주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의 왜곡된 상황 즉 소통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인권이 아닌 이권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돌봄과 민주주의는 지역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큰 도전이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주민을 개인으로 단절시키고 분절 및 고립시키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과 개인 시대의 부상에 대한 풀뿌리 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역회생 프로젝트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로부터의 기획이 아닌 풀뿌리 세계시민의 리더십이 주목된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참여 경험이 축적될 때 가벼운 공동체의 실험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는 과연 주민이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사회적 가치를 먹으며 자긍심을 갖고 가벼운 공동체 실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가를 주목할 때이다. 한국과 일본 사례에서 강조한 것처럼 풀뿌리 운동은 정치기획구조의 변화에 일회일비할 때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이 시민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풀뿌리 차원에서 지역 창의적 혁신가

로서 세계시민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원하고 협력의 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결코 속도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타자로서 인정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줌으로써 협력의 기회가 왔을 때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그것으로 공동으로 축적하는 과정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돌. 2020. 『경쟁 공화국』. 세창미디어.
- 강혜인·허환주. 2021. 『라디어가 출발했습니다』. 후마니타스.
- 공석기·정수복·임현진. 2023.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 진인진.
- 공석기. 2023. “지역 공동체와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주민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 『민위방본』. 지역재단 온라인 리포트 100호.
- \_\_\_\_\_. 2020.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제의 특징』.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공석기·임현진. 2017. 『주민과 시민사이: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 활동 톨아보기』. 진인진.
- \_\_\_\_\_. 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
- 김성훈. 2018. 『농은 생명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따비.
- 김창엽. 2013. 『건강할 권리: 건강 정의와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레스터 브라운. 이종욱 역. 2009. 『우리는 미래를 훔쳐쓰고 있다』. 도요새.

- 마강래. 2017.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개마고원.
- 박승일. 2021. 『기계, 권력, 사회: 인터넷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사월의 책.
- 박희준. 2022. 『플랫폼노베이션하라』. 김영사.
- 울리히 벡, 정일준 역. 1999.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 이광석. 2020. 『디지털의 배신: 플랫폼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유혹』. 인물과 사상사.
- 이일균. 2020. 『지방에 산다는 것』. 피플파워.
- 이정진. 2019.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여문책.
- 임현진·공석기. 2011. 『글로벌 NGOs: 세계정치의 ‘와일드카드’』. 나남.
- \_\_\_\_\_. 2014.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 파주: 나남.
- 전혜원. 2021.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서해문집.
-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역. 2021. 『돌봄 민주주의』. 박영사.
- 한병철, 전대호 역. 2023. 『정보의 지배: 디지털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김영사.
- 하승우. 2020. 『신분 피라미드사회: 능력주의가 낳은 괴물』. 이상북스.
- Ayres, Jeffrey. 2004. “Framing Collective Action Against Neoliberalism: The Case of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0(1): 11-34.
- Danaher, John. 2016. “The Threat of Algocracy: Reality, Resistance and Accommodation.” *Philosophy & Technology*, Vol. 29: 245-268.
- Gamson, William. 1992. *Talking Politic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m, Hyun-Chin & Suk-Ki Kong. 2020. “Civic Engagement in the Energy Transition since Fukushima and its Impact on Renewable Energy Policy Compensation in South Korea.”

- Korea Observer*, Vol. 51(3): 463–483.
- Lamont, Michèle. 2023. *Seeing Others: How Recognition Works—and How It Can Heal a Divided World*, Atria/One Signal Publishers.
- Manzini, Ezio. 2019. *Politics of the Everyday*, New York: Bloomsbury.
- \_\_\_\_\_. 2022. *Livable Proximity: Ideas for the City that Cares*, Milano: BUP.
- 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 1998.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Oxford, UK: Rowman & Littlefield.
- Moghadam, Valentine. 2008.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Islamism, Feminism, and the Global Justice Moveme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Ravenelle Alexandra J. 2019. *Hustle and Gig: Struggling and Surviving in the Sharing Economy*.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olte, Jan Aart. 2003. *Democratizing the Global Economy: The Role of Civil Society*, Coventry, UK: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 Smith, Jackie. 2008. *Social Movements for Global Democrac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